

‘노란봉투법’ 상정... 與 “민주노총 방탄법” 野 “직무유기”

민주, 환노위 법안소위서 단독상정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 野, 노조법 10건 우선 심사 요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안전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환노위는 30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법 개정안 10건을 추가 상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환노위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이수진(비례)·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다수결에 따라 상정됐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자주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며 “헌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에 나서면서 임 의원과 이 의원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논의를 갖고 그 속에서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고뇌의 과정이 국회 소위원회”라며 “여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파업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나가는 것은 타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결국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법안소위 퇴장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이라며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백정의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민주, ‘이상민 해임안’ 尹 거부시 탄핵소추

해임안 발의 후 尹 결단 기다리기로 與 “이재명 방탄용 해임건의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하면 민주당은 이번 주 주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매듭짓겠다. 이상민 장관의 지해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30일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나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형식과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해임건의안 발의를 건너뛰고 곧바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거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결국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처리한 후 윤 대통령의 응답이 없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극단적 대처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 탄핵소추안 발의 전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고 196명이다. 국가 대참사의 충격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꼬리자르기, 남탓만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국정조사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 책임자 파면, 유족의 절규와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예방 및 관리에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과 소방의 지휘라인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민 안전 업무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만하고 호도했다. (또한) ‘법적 책임이 없다’, ‘쏟아져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

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공무원과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제출이 사법리스크의 중심에 놓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말이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는 예상을 빚아가는 법이 없다”면서 “오늘로써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대표 방탄 기념비를 세웠다. 이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우선과 같은 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먼저 파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나 마나 국정조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태홍 기자 pth7285@

김진표,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통보

(국회의장)

“협치의 정신 발휘할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까지 예산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날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 의장은 30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금리 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백정의 기자

尹-바이든,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대통령실 “민주화 경험 등 공유 윤석열 정부 가치외교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년 3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상회의 첫날인 3월 29일에는 화상 본회의가, 둘째 날인 3월 30일에는 각 공동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하는 5개의 국가가 전체 회의를 주최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주최국을 맡았다.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유럽은 네덜란드,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 중남미에서 코스타리카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첫날 화상 본회의에서는 공동주최국 정상이 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은 둘째 날 지역회의에서 ‘인·태지역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인·태지역 회의의 주제는 ‘반부패’로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가치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 정상 5명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민주주의 모델의 활력과 우리 시대의 전례 없는 도전에 맞서기 위한 집단 행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년 3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이어 “우리는 책임 있고 투명한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 침략 전쟁과 기후 변화, 사회적 불신과 기술 변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가 챔피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다”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여타 초청국들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항구적인 번영,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함께 정상회의 파트너들이 ‘행동의 해(Year of Action)’ 기간에 이룬 공약에 대한 진전 사항을 보여줄 것”이라며 “또 한 차례의 성공적인 정상회의와 민주주의 부흥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 아래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반부패 ▲탈권위주의 ▲인권 증진 등의 의제로 한국을 포함한 약 110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백정의 기자